

## 2024년 장애인복지정책과 경기도의 대응과제

### 목차

1. 2024년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정책
- II.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및 핵심전략
- III. 정책 제언

### 중앙정부의 '약자복지' 노선에도 장애인복지예산은 미흡한 수준

- ▶ 정부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 추진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를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공백 예방,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통한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권 강화 및 장애 3법 제·개정, 거버넌스 강화 등 주요 추진과제 제시
- ▶ 하지만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축소 내지 현상유지 수준
  - 장애인연금은 '24년 대비 1.4% 삭감되어 장애인의 급여 체감도 하락, 장애 아동가족지원사업은 전년도(18%) 대비 10.4%에 그쳐 증가폭 감소, 핵심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지원규모, 운영방식 등 예산규모와 추진체계 전반 미흡

### 경기도 장애인정책의 주요변화 및 중앙정부와의 특성비교

- ▶ 민선 8기 핵심과제 '경기 360° 돌봄'을 포함 총 9개 사업 추진
  - 기존 6개 장애인복지 영역(장애인 기회소득, 누림통장,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양육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대상 및 지원서비스 확대 추진
  - 또한 민선 8기 신규 핵심과제인 '경기 360° 돌봄' 중 장애인 '어디나 돌봄' 3종 서비스를 신규 개발, '24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
- ▶ 중앙정부와 차별되는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특성
  - 시설과 가정 구별 없이 장애인과 가족이 필요로 한 야간과 휴일돌봄을 신설함과 동시에 최종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을 인정하는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함으로써 중앙의 돌봄정책 취약성 보완, 선도
  -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경기 360° 돌봄' 패키지 정책 수립을 통해 최종증 발달장애인 맞춤형돌봄과 전문인력양성과정, 추가수당 등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경기도형 기회소득, 누림통장과 같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서비스 선택권 강화 확대

### 정책 제언

- ▶ 장애인복지 핵심사업 지원체계 조기 구축 및 신속 추진
- ▶ 개인예산제 도입에 앞서 경기도 장애인기회소득의 선제적 대응 강화



9 772982 554000  
ISSN 2982-5547

# I. 2024년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정책

'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대비 12.1% 증가

## '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기금운영계획 총지출 규모는 122조 3,779억 원 확정)

- ▶ 2023년 예산 109조 1,830억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
  - 2023년 12월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
  -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5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고, 복지부 총지출은 12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
  -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5% 상승(17.1% → 18.6%)

〈표 1〉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단위 : 억 원)

'23년 예산 (A)	'24년 예산		증감 규모(증가율)	
	정부안 (B)	국회 확정 (C)	정부안 대비 (C-B)	전년 대비 (C-A)
109조 1,930	122조 4,538	122조 3,779	△759*(△0.06%)	13조 1,949(+12.1%)

## ▶ '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증액된 세부 사업내용은 총 4개 영역

- 첫째, 정신건강 지원사업은 정신질환 치료지원, 정신의료서비스 기반구축, 자살예방 상담전화에 총 132억 원 증액
- 둘째,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신설, 양육지원에 총 333억 원 증액
- 셋째,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은 요양병원 간병비지원 시범사업, 노인건강 관리, 장애인연금, 장애인 맞춤형 지원, 시·도사회서비스원에 총 717억 원 증액
- 넷째, 필수의료 지원사업은 공공병원 역량강화, 인프라 지원에 총 570억 원 증액

〈표 2〉 2024년 보건복지부 영역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2023년 예산 (A)	2024년 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출(A+B)	1,091,830	1,223,779	131,949	12.1
예산 (A)	681,447	741,794	60,347	8.9
기금 (B)	410,383	481,986	71,603	17.4
사회복지 ①	922,185	1,049,119	126,934	13.8
기초생활보장	164,059	179,197	15,138	9.2
취약계층지원	46,112	51,068	4,956	10.7
공적연금	371,600	443,320	71,720	19.3
아동·보육	98,470	108,888	10,418	10.6
노인	232,289	256,483	24,194	10.4
사회복지일반	9,655	10,163	508	5.3
보건 ②	169,645	174,660	5,015	3.0
보건의료	45,543	37,590	△7,953	△17.5
건강보험	124,102	137,070	12,968	10.4

1) 보건복지부(2023).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 3,779억 원 확정』. 보도자료(12.21)

2024년 중앙정부는  
‘약자복지 2.0’ 추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조

## 2024년 중앙정부의 변화된 장애인정책 주요 추진과제<sup>2)</sup>

- ▶ 정부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 추진
  - 주요 추진과제는 최종증발달장애인 1:1맞춤형돌봄서비스 실시 등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를 추진하고자 함
- ▶ 첫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를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공백 예방
  -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돌봄지원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종 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규 도입, 다양한 지원서비스 확대
  -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대상을 1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확대
  - 일시적 긴급돌봄(최대 7일, 연 30일)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72억 원, 17개 시도)을 지속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돌봄 공백을 사전 예방
- ▶ 둘째,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통한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와 탄력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24년 하반기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 ‘26년 본사업 실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할 예정
- ▶ 셋째,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해소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비장애인과 건강격차 해소, 장애유형별 건강욕구 고려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의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강화(18회→24회)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리
  -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7천 명 확대(‘23. 79,000명 → ’24. 86,000명) 지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23. 12개소 → ’24. 16개소)

2)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장애인정책 주요 추진과제』

# I. 2024년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정책

또한, 중앙정부는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편의시설 이용권 강화, 장애 3법 제개정 등 추진

- ▶ 넷째,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자립기반 마련
  - 장애인연금<sup>3)</sup>은 '23년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기초급여<sup>4)</sup> 1만 1,630원 인상하고, 부가급여<sup>5)</sup>도 1만원 인상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sup>6)</sup>
  - 장애인일자리를 전년 대비 2천개 확대하여, 3만 1,546명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 자리를 지원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유형 3종<sup>7)</sup> 추가 개발 및 지원
  -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179개소(신축 6개소, 증축 7개소 등) 기능보강 지원
- ▶ 다섯째, 장애인 편의증진 및 접근권 제고를 통한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강화
  -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최소면적기준 삭제·축소)하고, 의무설치 건축물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 BF인증제도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BF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 ▶ 여섯째, 장애 3법 제·개정 및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강화
  -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노력
  - 관계부처, 장애인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중심의 정책거버넌스 강화

〈그림 1〉 2024 변화된 장애인정책 주요추진내용

구분	사업명	지원 내용		'23년	'24년
장애	장애인연금	급여단가 인상	기초급여	월 32.3만 원	(잠정)월 33.4만 원 *연말 통계청 물가상승률 발표 시 반영하여 고시
			부가급여	월 8만 원	월 9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 확대		0.6만 명	1.0만 명
		3~7급 국가보훈대상자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자격부여		-	9월부터~
	최중증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주간 그룹형	-	1,500명
			주간 개별	-	500명
			24시간 개별	1개 시도	17개 시도
		종사자 전문수당 신설		-	월 5만 원
	장애인일자리	일자리 수 확대		3.0만 개	3.2만 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연 960시간	연 1,080시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79천 명	86천 명	

출처 : 보건복지부(2023)

3) 장애인연금은 ①소득보전 목적의 기초급여와 ②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  
 4) 기초급여 : ('23년) 최대 323,180원 → ('24년) 최대 334,810원 (+11,630원)  
 5) 부가급여 : ('23년) 최대 8만원 → ('24년) 최대 9만원(+1만원)  
 6) 매월 급여액 : ('23) 최대 403,180원 → ('24년) 424,810원  
 7)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2024년 중앙정부는 '약자복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축소 내지 현상유지 수준

## 2024년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정책의 한계점

- ▶ '약자복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정채된 가운데 축소 내지 현상 유지 수준<sup>8)</sup>
  - 장애인연금은 대표적인 소득보장 급여임에도 '24년 예산은 '23년 대비 1.4% 삭감 되어 최근 5년간 수급자수 감소율(0.2%)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급여 체감도 하락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등록 장애아동 중 차상위계층까지 지급하던 장애수당은 4.9% 삭감
    - 장애인등록과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운영하는 장애정도심사제도는 2.6% 증액에 그치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과 일관성에 문제점이 제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5% 수준의 예산증가율을 유지하는 반면,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은 10.4%에 그쳐 22년(27%), 23년(18%)에 비해 증가폭 감소
  - 장애인 개인예산제<sup>9)</sup> 시범사업은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에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8곳에서만 모의적용하고 있어 정책실행의 한계점 노출
    - '23년 4개 지자체에서 '24년 8개 지자체로 예산은 확대되었으나 참여자규모는 활동 지원 수급자의 5%(210명)만 모의적용하는 상황으로 2년 후 본사업 추진의지에 회의적임
    - 더구나 현 정부의 '개인예산제'에 내재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기존의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방식은 손대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일부에서만 다른 서비스를 구해 하거나 제공인력을 선택하는 제한된 운영에 그침
    - 또한 서비스 결제방식도 서비스 이용부담을 이용자가 먼저 지출하고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인의 선택권에 상당한 제약을 지님
  - 지역사회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예산도 대부분 감액되었고, 특히 주간보호시설은 중증 및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인프라임에도 30.2%로 가장 크게 삭감
  - 장애인일자리지원은 일자리 수 2천 개 확대를 목표로 7.4% 증액되었으나, '22년 이후 증가율은 계속 감소추세이며 장애인직업재활지원은 '23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장애인의 근로활동 창출 확대에도 제동
  - 마지막으로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예산 중 약 20억 원의 가장 큰 삭감이 이루어졌고, 그 외 사업들도 '23년 수준으로 동결되는 등 세부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 예상

8) 참여연대(2023). 「2024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 참조.

9)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에게 자신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로 분절되어 있던 제도들을 개인을 중심으로 하나의 예산으로 통합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개개인의 욕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II.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 및 핵심전략

'24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은 기회소득, 누림통장 등 6개 영역에서 지원 확대

### 2024년 달라지는 경기도 장애인정책 주요 추진과제<sup>10)</sup>

- ▶ 2024년 장애인복지영역은 총 9개 사업(기존 6개, 신규 3개)에서 확대 및 신규 지원
  - '24년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이 대부분 삭감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상당한 적신호가 예상
  - 이에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31개 시군의 부족한 기존 국비지원사업들에 대한 도 자체 추가지원(지원대상, 지원금액, 서비스 단가 등)뿐 아니라 도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
  - 본 장에서는 '24년 변화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사업들을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24년 달라진 중앙정부 정책과 비교 분석하고자 함
- ▶ 우선 장애인 기회소득, 누림통장 등 기존 6개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지원 확대 추진
  - 첫째, 장애인기회소득사업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 등을 사회적 가치창출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과 자기선택권 보장 등 더 나은 기회 제공
    - 기존내용 : 사업량 7,000명, 지원액 월 5만원
    - 변경내용('24) : 사업량 10,000명(3,000명 ↑), 지원액 월 10만원\*(5만원 ↑) '24년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
  - 둘째, 장애인누림통장사업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편적인 자산형성지원으로 빈곤예방 및 자립기반을 마련
    - 기존내용 : 대상연령 19~21세, 사업량 3,600명
    - 변경내용('24) : 대상연령 19~23세(2세 ↑), 사업량 3년간 총6,000명(2,400명 ↑) '24년 신규모집자 2,400명
  - 셋째,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추가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
    - 기존내용 : 도비장애수당 4만원
    - 변경내용('24) : 도비장애수당 6만원(2만원 ↑) 지급단가 인상
  - 넷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 기존내용 : 사업량 14,507명('23년), 시간당 단가 15,570원
    - 변경내용('24) : 사업량 17,274명(2,767명 ↑), 시간당 단가 16,150원(580원 ↑)

10) 경기도 보도자료(2023). 「2024년 새해 더 좋아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12.28)」 참고.



## II.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 및 핵심전략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핵심정책으로 돌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경기 360°  
돌봄' 추진

- 다섯째, 장애아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기존내용 : 사업량(돌봄서비스 653가구, 휴식지원 199가구), 연 960시간 지원
  - 변경내용(24) : 사업량 돌봄서비스 852가구(199가구 ↑), 휴식지원 200가구, 연 1,080시간 지원(120시간 ↑)
- 여섯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기존내용 : 사업량 200명, 출산(유산·사산) 지원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변경내용(24) : 사업량 221명(21명 ↑), 출산(유산·사산) 지원 확대,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200천원 ↑)

▶ 다음으로 돌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경기 360° 돌봄' 사업을 신규 추진<sup>11)</sup>

- '경기 360° 돌봄'은 도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선 8기 핵심정책으로 크게 3가지 돌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
  - '언제나 돌봄'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
  - '어디나 돌봄'은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
- '어디나 돌봄'의 추진배경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돌봄욕구 증가에도 프로그램 부족, 접근성 미흡 등 이유로 비장애인 대비 참여가 어렵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 붕괴 등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요구 증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31개 시군·시설·가정 구별없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돌봄 제공을 목표로 크게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과 '최중증 장애인 맞춤 돌봄' 두 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은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 '최중증장애인 전문인력양성·돌봄'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
  - '최중증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은 서비스나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

11) 경기도(2023). 「360° 돌봄 장애인 어디나 돌봄 기본계획(안)」 내부자료 참고.

## II.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 및 핵심전략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모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 최종중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규모, 운영방안에 있어 차이가 존재

〈표 3〉 2024년 변화되는 경기도 장애인정책 세부내용

제 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 거(시행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확대	◦사업량 : 7,000명 ◦지원액 : 월 5만 원	• 사업량 : 10,000명(3,000명 ↑) • 지원액 : 월 10만 원*(5만 원 ↑) * '24년 하반기부터 적용(예정)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 ('24. 7. 1.)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확대	◦대상연령 : 19~21세 ◦사업량 : 3,600명	• 대상연령 : 19~23세(2세 ↑) • 사업량 : 6,000명(2,400명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 ('24. 1. 1.)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 신규 >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내용 : 야간과 휴일에 재활·치료, 교육·문화 및 가족지원사업 추진 • 사업량 : 24개(기관) 프로그램	장애인복지법 ('24. 1. 1.)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 인상	◦도비 장애수당 4만 원	• 도비 장애수당 6만 원(2만 원 ↑)	장애인복지법 ('24. 1. 1.)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 15,570원	• 시간당 단가 16,150원(580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4. 1. 1.)
장애아 양육지원	◦연 960시간 지원	• 연 1,080시간 지원(120시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4. 1.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유산·사산) 지원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 출산(유산·사산) 지원 확대 - 태아 1인 기준 1.2백만 원(200천 원 ↑)	장애인복지법 ('24. 1. 1.)
최중중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돌봄	< 신규 >	• 대상 : 돌봄제공 기피하는 발달장애인 • 내용 : 전문 돌봄 인력 양성 및 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량 : 최중중 발달장애인 60여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 1. 1.)
최중중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 신규 >	• 대상 : 서비스 및 시설 미이용 최중중 발달장애인의 가족 • 내용 : 가족돌봄 제공시 돌봄수당 지원 • 사업량 : 최중중 발달장애인 210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 1. 1.)

출처: 경기도(2023.12) 「2024년 경기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 2024년 중앙정부와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간 특성 비교

- ▶ 첫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규모 및 돌봄서비스의 적실성
  - 중앙정부는 6월부터 최중중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나, 서비스 유형별 전국단위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보호자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의 경우 현행 지원방식(최대 7일, 연 30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만 일부 증액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기엔 불충분한 수준
  - 반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시설·가정 구별 없이 장애인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요구해오던 야간과 휴일 돌봄을 신설하고, 최중중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을 인정하는 '가족돌봄 수당'을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돌봄정책 취약성에 대비되는 정책 발목을 선도
  - 특히 '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돌봄사업은 지원대상 및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돌봄서비스들과 달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곳 어디서나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지님
- ▶ 둘째, 최중중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수급, 관리 등 운영방안의 구체성
  - '24년 중앙정부가 발표한 최중중발달장애인 돌봄지원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돌봄서비스 제공 유형과 지원대상 이외에 지원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수급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종사자 전문수당(월 5만원)만 신설한다고 발표하고 있어 해당 신규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불명확한 상황



## II.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 및 핵심전략

중앙정부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소득보장제도 예산삭감  
등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경기도 장애인기회소득,  
장애수당 등으로 보완

- 이에 비해 경기도는 23년 하반기부터 '경기 360° 돌봄' 패키지 수립을 통해 장애인 '어디나 돌봄' 추진체계를 구축, '최중증발달장애인 맞춤형돌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맞춤형돌봄 추가수당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 특히 도전적 행동으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오랜 돌봄기피 문제에 대해 민선 8기 도정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 셋째,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경기도 기회소득의 선도성
  - 중앙정부는 '23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 시범 지자체 확대(8개)에 따른 지원예산을 증액하였으나, '26년 본사업 추진계획을 앞두고 모의적용 과정에 참여자 규모, 지원방식, 서비스 이용방법 등에서 여러 한계점 노출
  - 중앙정부의 개인예산제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기도 장애인기회소득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범위를 다양한 분야(운동, 문화, 복지, 여가, 교육, 봉사 등)로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활동과 자기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보다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으로 평가
- ▶ 넷째,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성
  - '24년 중앙정부의 소득보장제도 예산삭감(1.4%)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의 경우 4.9% 감소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 불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음
  - '24년 경기도 장애수당은 중앙정부의 영향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급단가와 지원대상자는 확대된 반면 차상위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 규모는 감소
  -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소득상실과 추가지출 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의 근본적 취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장애수당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보니 장애인의 소득 불평등 이슈가 지속적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선정기준 완화 등 보완책 마련 요구
  - 반면 경기도는 장애인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4년부터 장애인누림통장사업의 대상연령 상향, 지원대상 확대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소득보장급여 체감도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저축성 현금 추가지원 강화
- ▶ 마지막으로, 중앙 차원의 제도적 변화가 취약한 장애아, 여성장애인 등 소수장애인 사업 확대
  - '24년 중앙정부의 변화된 장애인정책 추진내용 가운데 눈에 띄지 않은 소수장애인에 포함된 장애아와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들에 대한 예산, 사업량, 지원시간 등 확대, 돌봄사각지대 장애인에게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 강화

어디나 돌봄,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수당,  
장애인누림통장,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  
핵심사업 지원체계  
조기 구축

#### 경기도 장애인복지 핵심사업 지원체계 조기 구축 및 지원 확대

- ▶ (어디나 돌봄) '24년부터 도입되는 장애인 돌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지원체계 조기 구축
  -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장애인 '어디나 돌봄' 사업이 복지현장과 돌봄 사각지대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누림센터) 내 맞춤형돌봄 전담팀을 조기 구축하고, 돌봄사업 참여기관 모집·선정 과정부터 사업의 방향성 설정, 사업 운영 진행 전반에 걸친 밀착 컨설팅 지원이 필요
  - 사업 수행기관들이 프로그램 운영 시 겪게 되는 장애 내지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24년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검증을 통해 향후 본사업으로 상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장애인기회소득) 개인예산제 도입에 앞서 장애인기회소득의 선제적 대응 및 중앙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경기도 시군의 참여 홍보·지원
  - 현재 경기도 기회소득은 13~64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대다수 장애인의 소득보장기회가 축소될 수 있어 향후 대상자 선정기준(소득기준)을 점차 완화
  - 또한 중앙정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경기도 시군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참여독려와 홍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필요
- ▶ (장애수당) 중앙정부의 차상위 장애수당 예산삭감에 대응한 경기도의 추가 지원 고려
  - '24년 중앙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라 차상위 장애수당 예산삭감의 여파로 도비도 삭감되어 경기도 내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수급자 및 장애아동 지원규모가 약 1천4백여명 감소
  - 이에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차상위 위기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 ▶ (장애인누림통장)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대상연령기준 확대 필요
  - 장애인의 보편적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현행 19~23세까지 제한된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필요
  - 이에 필요한 경기도 기준보조율을 현행 30%에서 상향조정해 시군 지원비 부담을 경감, 더 많은 시군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 제공 검토
- ▶ (복지사각지대 지원) 장애아동, 여성장애인 등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 '24년 중앙정부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됨에 따라 경기도 장애아양육,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의 도 자체 지원 강화